

대졸자 취업난

유 팔 무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교육부는 지난 10월 14일 교육여건이 우수한 76개 사립대학을 '98학년도부터 정원 자율화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로 인해 '98학년도의 대입 정원은 3만 5천 명이 더 늘어 31만 7천여 명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원 자율화가 확대되자, 어떤 대학에서는 만성 재정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그 반대로 시설 부족의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기도 한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게 되었다고 걱정을 하는가 하면, 언론에서는 지금도 심각한 대졸자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이 뒤따를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원 자율화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주는 일이며, 대학의 문호를 그만큼 더 개방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대학의 문호가 개방되는 정도만큼 '대학입시지옥' 현상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수 학생 유치에 따르는 어려움은 오히려 대학으로 하여금 전문성과 특성, 그리고 교육의 질과 학생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원 자율화 확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들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취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물론, 대학 졸업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실업률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만일 한국 경제가 다시 팽창국면에 들어서고 고급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면, 결과는 그 반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관계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는 치더라도 양자를 유연하게 연결시켜 주는 복지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면,

취업난은 훨씬 더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취업 정보지들에 따르면, 하반기 취업 경쟁률은 사상 최고인 4 대 1 정도에 이르고 한다. 금년 5월에 있었던 7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106 대 1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취업난이 심각하자 근래에는 4학년 학생들의 휴학이 전국적으로 급증한다고 한다. 이들은 대개 사설학원과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수험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취업설명회나 취업박람회나 하는 것들을 개최하여 취업정보안내를 하는가 하면,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 품질관리를 약속하는 ‘졸업생 AS 프로그램’, ‘졸업생 리콜제’ 같은 것과 졸업생 재교육 시스템이 도입,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취업문제는 개인이나 대학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전체 사회구조에 따른 문제이다. 기업이나 고용기관에서도 무턱대고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이 일은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다. 물론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대졸자 취업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취업난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으며,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커다란 효력을 볼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취업알선제도를 근원적으로 재점검하여 기능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인력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일이다. 현재 단순노무, 판매직 위주의 직업 소개·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의 국립직업안정기관의 업무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대졸자들을 포함하는 전 직종, 전 직급에 대한 직업 소개·알선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석사 및 대학 졸업자들에 대해서도 연구 및 취업 지원정책을 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 보조로 대학, 연구기관 등 대졸자들과 인접한 고용기관에 조교직이나 기능직을 만들어 임시로 취업의 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기업과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도 이와 흡사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복지’라는 각도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선진국의 복지제도와 고용대책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근래에 정권 교체기를 맞이하여 각 정당의 대권 후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재정을 6%로 늘리겠다는 등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들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차기 정권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의 기초가 복지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대졸 취업난을 완화, 해소하려는 복지 차원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입안,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

유팔무/서울대 사회학과와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수학한 후, 자유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며, 학보사 주간, 계간 학술지 『경제와 사회』 편집주간, 본지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산업사회학회 부회장,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책위원, 사회과학 포럼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공저로 『지배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춘천리포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등이 있다.